

[김&장 사회]

2015년 국가직 사회 사형 해설 장수원 교수 <KG 패스원 학원>

1. [정답] ②

[출제단원] IV. 사회계층과 불평등

[출제영역] 사회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제시문에서처럼 사회계층화 현상이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분배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사회 발전의 원동력 역할도 한다고 보는 것은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① 임금의 차등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지배집단의 강제와 억압 때문이다. (X)

⇒ 임금의 차등과 같은 사회 불평등이 기득권의 강제와 억압의 결과물이라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② 차별적 보상 체계는 동기 부여를 통해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O)

⇒ 기능론적 관점에 따르면 사회적 희소가치의 차등분배에 따른 계층의 분화는 구성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경쟁을 유도하여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됩니다.

③ 가정에서 부부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불평등한 부부관계에서 비롯된다. (X)

⇒ 사회 구성원간의 불평등한 관계가 사회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④ 교육은 계층이동의 통로가 되기보다 기존의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재생산할 뿐이다. (X)

⇒ 교육이 계층 세습의 도구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기능론적 관점에서는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2. [정답] ②

[출제단원] III. 문화와 사회

[출제영역] 문화전파와 문화접변

ㄱ. 직접 전파 (O)

⇒ 제시문에 따르면 음식 문화가 이주민들에 의해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에 의해 직접 문화 요소가 전달되는 것을 직접전파라고 합니다.

ㄴ. 자극 전파 (X)

⇒ 간접 전파는 방송, 서적, 인터넷 등과 같은 매체를 통해 문화가 전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시문에서는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ㄷ. 자발적 문화 접변 (O)

⇒ 문화 접변은 강제성 유무에 따라 강제적 문화 접변과 자발적 문화 접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강제적 문화 접변은 정복이나 식민 통치의 경우처럼 강제성을 띤 외부의 압력에 의해 일어나는 문화 변동이고, 자발적 문화 접변은 것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문화 변동을 의미합니다. 제시문에 따르면 외국의 음식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억압과 강제가 없었고, 외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한국인 사이에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봐서 자발적 문화 접변이 나타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ㄹ. 문화 공존 (O)

⇒ 문화 공존(병존)이란 두 개의 문화가 접촉할 때 각각의 문화가 그 고유의 정체와 가치 체계를 그대로 지키면서 공존하게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시문에 따르면 외국 음식 문화가 들어와서 기존의 한국 음식 문화가 소멸(문화 동화)되었다거나, 새로운 문화 요소가 만들어졌다(문화 융합)는 언급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음식 문화가 존속하는 가운데, 새로운 음식 문화가 들어와서 공존하는 문화 공존(병존)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ㅁ. 문화 융합 (X)

⇒ 문화 융합이란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 문화가 전파될 때 그대로 이식되지 않고 재해석과 절충 등이 나타나서 어느 문화에도 속하지 않았던 제3의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내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제시문의 내용 중 “자국의 음식 맛을 그대로 살린”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외국의 음식 문화를 들어오는 과정에서 새로운 변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정답] ①

[출제단원] I. 사회문화 현상의 탐구

[출제영역] 사회 조사 과정

제시문은 자원봉사 활동과 시민의식 함양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참고로 문제에서 ‘가설’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무조건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는 문제제기(연구 주제 선정) 단계, (나)는 대안 모색 단계, (다)는 결론 도출 단계, (라)는 가설 설정 단계, (다)는 자료 수집 단계입니다.

① (X) 위 연구과정에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지 않다.

⇒ 실증적 연구방법은 측정 가능한 자료를 통해 현상간의 법칙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 조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설정된 가설의 내용에 측정 불가능한 추상적 표현이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추상적 개념을 측정 가능한 구체적 개념으로 변형시켜줄 필요가 있는데, 이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라)에서 설정된 가설에 ‘시민 의식 함양’이라는 측정 불가능한 개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필요합니다.

② (O) (가)와 (나)의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 있다.

⇒ 주제 선정(가), 대안 모색(나), 가설 설정(라)의 단계에서는 연구자의 개치 개입이 허용됩니다.

③ (O) (다)의 분석 결과는 ○○시의 청소년으로 일반화될 수 있다.

⇒ 이 사례에서 조사 대상의 범위를 ‘○○지역 청소년’으로 설정하였고, 실제로 설문 조사의 대상을 ‘○○시의 청소년’으로 잡아서 자료를 수집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얻은 결과를 ‘○○시의 청소년’에 일반화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조사 대상을 ‘○○시의 청소년’으로 설정했는데, 자료 수집의 대상은 ‘○○시의 고등학생’으로 한정한다면 청소년에는 고등학생 말고도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의 연령에 해당되더라도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지 않은 학생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얻은 결과를 일반화할 수 없을 것입니다.

④ (O) 일반적으로 연구과정은 (가), (라), (마), (다), (나) 순으로 진행된다.

⇒ 실증적 연구 방법은 주제선정(가) → 가설설정(라) → 연구 설계 → 자료 수집(마) → 자료 분석 및 통계처리 → 가설 검증 → 결론 도출(다) → 대안 모색(나) 순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지입니다.

4. [정답] ③

[출제단원]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사회 실재론 vs 사회 명목론

제시문은 로크의 사회 계약설의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 계약설에 따르면 사회는 인간의 천부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것은 개인을 사회보다 더 중요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회계약설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중 사회 명목론과 관련이 있습니다.

①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총합 이상이다. (X)

⇒ 전체가 부분의 단순한 총합 이상이라고 보는 것은 사회 실재론입니다. 사회 명목론에 따르면 전체는 부분의 합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②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된다. (X)

⇒ 사회가 개인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입니다.

③ 개인의 능동성이 사회의 구속성보다 우선한다. (O)

⇒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을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존재로 보는 것은 사회 명목론입니다. 사회 실재론에 따르면 사회는 독립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은 자신이 속한 사회의 속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는데, 이를 사회의 구속성이라고 합니다.

④ 개인은 사회라는 생명체를 유지하는 각각의 기관이다. (X)

⇒ 개인은 사회라는 생명체를 유지하는 각각의 기관이라고 보는 이론은 사회 유기체설입니다. 사회 유기체설에 따르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이 존재하는 것처럼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개인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은 사회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개인보다 사회를 우선시하는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 실재론의 이론적 배경이 됩니다.

5. [정답] ②

[출제단원] II. 개인과 사회 구조

[출제영역] 관료제와 탈관료제

제시문의 A는 관료제입니다. 관료제의 어원은 bureau(사무실)와 cracy(지배)로, 사무실 책상물림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입니다.

① (X)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한다.

⇒ 업무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은 탈관료제의 특성입니다. 관료제는 절차와 규칙에 따라 업무가 진행되다보니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창의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관료제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탈관료제의 특징인 것입니다.

② (O) 일정한 절차와 규칙에 따른 표준화된 업무수행이 이루어진다.

⇒ 관료조직은 조직의 모든 활동이 일관성 있는 절차와 규칙에 의하여 지배됩니다. 새로운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거기에 해당하는 해결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모든 사안에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규칙과 규정을 성문화해두는 것이 효율성과 능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는 규칙과 규정은 다양한 직책의 책임과 그 직책들 간의 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담당자가 누구든 관계없이 조직의 활동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입니다.

③ (X) 의사결정권이 하위직급에 집중되어 현장실무자의 의견이 신속하게 반영된다.

⇒ 관료제는 하위직에서 논의되어 올라오는 의사결정보다는 주요 정책결정이나 의사결정이 위에서 확정된 후 수직적으로 하달되도록 조직됩니다.

④ (X)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서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임시조직 구성이 용이하다.

⇒ 특정 문제 해결을 위하여 부서의 구분에 얽매이지 않는 임시조직 구성이 용이한 것은 탈관료제의 특징입니다.

6. [정답] ①

[출제단원] III. 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국회의 권한 - 국가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① 대법관 임명(O)

⇒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헌법 제104조 제2항).

② 법무부장관 임명(X)

⇒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합니다(헌법 제94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③ 국가정보원장 임명(X)

⇒ 국가정보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④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 임명(X)

⇒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기는 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7. [정답] ④

[출제단원]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범죄의 성립 요건 - 구성 요건

제시문은 형법 제297조의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기 위해서는 범죄행위가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유형과 일치해야 합니다(구성요건해당성). 이를 위하여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제시된 형법 제297조의 경우 ‘폭행’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협박’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어떠한 행위를 ‘강간’이라고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고,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범죄의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그 효과로서 형벌을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법 적용의 결과 피고인에게 부과하는 형벌에 대한 내용일 뿐이며, 별도의 법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8. [정답] ②

[출제단원] V. 사회생활과 법

[출제영역] 행정 쟁송 제도

①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모두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이다.(O)

⇒ 행정구제제도는 사전적 구제수단과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행정심판, 행정소송과 같은 행정쟁송은 사후적 구제수단에 해당합니다.

※ 참고 - 행정 구제 제도

구분			내용
사전적 구제 수단			청문, 공청회, 민원 처리
사후적 구제 수단	행정쟁송	행정심판	행정 분쟁에 대해 행정기관 내부적인 자기 반성을 통한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
		행정소송	정식재판 절차를 통한 행정 분쟁 해결
	행정상 손해전보	행정상 손해 배상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 등의 위법한 활동에 대한 손해 배상 제도
		행정상 손실 보상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한 특별한 희생에 대한 재산적 보상

②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에서는 모두 행정행위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X)

⇒ 행정심판의 대상은 “위법·부당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인 것에 비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은 “위법한” 처분 또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행정심판이 행정기관 내부적인 구제수단이기 에 위법하지는 않더라도 ‘부당한’ 행정처분도 그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지만, 행정소송은 사법부에 의한 구제수단이기 에 권력분립의 원칙상 위법한 행정청의 처분만을 대상으로 할 뿐, 위법하지 않더라도 부당한 행정처분은 그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③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의 주체가 되나, 행정소송은 법원이 판단의 주체가 된다.(O)

⇒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가 판단하는 것이며, 행정소송은 법원이 정식재판 절차를 통해 판단합니다.

④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의 확정판결은 소송의 당사자인 행정청을 구속한다.(O)

⇒ 행정심판을 청구한 청구인은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재결 또는 일부인용재결의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위법을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구속(=구속)합니다(행정소송법 제30조).

9. [정답] ④

[출제단원] III.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기본권의 종류

제시문에 나와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근로의 권리(제32조), 인간다운 생활권(제34조), 환경권(제35조)은 사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① 복지국가·사회국가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O)

⇒ 사회적 기본권이란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복지국가·사회국가 원리에 기초한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② 주로 국회의 입법권 행사에 의해 실현되는 권리이다.(O)

⇒ 사회적 기본권은 추상적 권리로서, 입법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현실적 권리가 되는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③ 원칙적으로 국민만이 누리는 권리이나,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는 외국인에게도 보장된다.(O)

⇒ 사회적 기본권은 헌법의 차원에서 자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권이므로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본권 중 환경권, 건강권 등은 인간의 권리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는 외국인에게도 인정됩니다. 참고로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보호 규정은 외국인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 결과 외국인인 근로자의 임금채권도 보호되어야 하고 그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판 1995.9.15, 94누12067).

④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침해해 배제하는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이다.(X)

⇒ 사회적 기본권은 국가의 급부나 배려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권리에 해당합니다. 소극적·방어적 성격의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에 해당합니다.

10. [정답] ③

[출제단원] IV.개인 생활과 법

[출제영역] 불법 행위

①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불법행위라 한다.(O)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민법 제750조), 이러한 위법행위를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② 손해배상책임에 대해서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O)

⇒ 과실책임주의란 행위자는 자신의 귀책사유(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을 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과실이 없는 경우나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X)

⇒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악의를 품고 비난받아 마땅한 무분별한 불법행위를 한 경우, 민사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징벌을 가할 목적으로 부과하는 손해배상으로, 실제 손해액을 훨씬 넘어서 많은 액수를 부과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가해자의 비도덕적·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서 제재를 가함으로써 형벌적 성격을 띠는 손해배상을 의미합니다. 이

러한 징벌적 손해배상은 영국·미국 등 영미법을 근간으로 하는 국가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1년 처음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유망기술을 가로채 유용한 경우 3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내용이 채택되었으나, 이는 예외적인 경우이며, 원칙적으로는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④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와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O)

⇒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는 무한히 확대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를 받다가 의사의 과실로 병이 확대되고 자살까지 하게 된 경우에 의사의 과실로 인한 손해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의 범위를 일정한 범위에서 제한하고자 하는 이론들이 등장하는데, 통설과 판례는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상당인과관계설).

11. [정답] ②

[출제단원] II.민주 정치의 과정과 참여

[출제영역]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

① 정당은 지역구 후보와 비례대표 후보에 동일한 사람을 중복하여 공천할 수 없다.(O)

⇒ 정당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를 각각 공천할 수 있을 뿐이며, 동일 인물을 중복하여 공천할 수는 없습니다.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권역별로 선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대표성이 강하다. (X)

⇒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단위로 할 것인지, 전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고 각 권역에 정당별로 비례대표 명단을 만들 것인지에 따라 '전국단위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과 관련하여 전국 단위로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5년 2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법 개정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이는 아직 논의되고 있는 단계일 뿐입니다.

③ 소선거구 단순다수제를 채택하고 있는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O)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채택하고 있는 '소선거구제 + 단순다수제'의 경우 지역구 후보 중 최다 득표를 한 1인만 당선이 되므로, 그 외의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들의 표는 모두 사표가 됩니다. 따라서 지역구 후보 중 2인 이상을 선출하게 되는 중·대선거구제에 비하여 사표가 많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④ 우리나라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를 상호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합한 병립식을 취하고 있다.(O)

⇒ 우리나라는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전에는 유권자가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에게 1표를 행사하며, 별도의 정당투표는 하지 않고, 정당이 지역구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헌법재판소로부터 직접 선거의 원칙과 평등선거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받았고, 이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여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부터는 1인 2표제를 채택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투표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별도의 정당 투표를 허용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거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기 위한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출을 위한 비례대표제를 상호 연계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결합한 병립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12. [정답] ①

[출제단원] III.우리나라의 헌법

[출제영역] 국회의 권한

국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내용
입법에 관한 권한	㉠ 헌법 개정 제안·의결권 ㉡ 법률 제·개정권 ㉢ 조약 체결·비준 동의권
재정에 관한 권한	㉠ 예산안 심의·확정권 ㉡ 결산 심사권 ㉢ 예비비 지출 승인권
국가 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임명 동의권 :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 ㉡ 선출권 :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 3인
국정의 감시 및 통제에 관한 권한	㉠ 국정감사·조사권 ㉡ 탄핵소추권

따라서 (가)는 국무총리 임명 동의권에 해당하므로 ‘국가 기관 구성 기능’, (나)는 국회의 대정부 질문에 해당하므로 ‘국정 감시 통제 기능’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대정부 질문’이란 국회 본회의에서 회기중 기간을 정하여 국정전반 또는 국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정부에 대하여 질문(대정부질문)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3. [정답] ③

[출제단원] I.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아테네 민주 정치

① 민회는 추천제로 선출된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하였다.(X)

⇒ 아테네 민주 정치의 정치 기관은 ‘민회’, ‘평의회’, ‘재판소’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중 ‘민회’는 시민권을 가진 성인 남자가 참석하는 입법, 행정, 군사에 관한 최고 의결 기관으로서, 공공문제를 시민들의 자유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였습니다. 즉, ‘민회’는 시민이 직접 그 구성원이었으며, 시민들의 대표로 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② 민회는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였다.(X)

⇒ 아테네의 민주 정치는 시민권을 가진 모든 시민(성인 남자)들이 직접 공동체의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 정치’에 해당합니다. 정당정치와 의회정치를 매개로 의사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간접 민주 정치’에 해당합니다.

③ 추천제는 전문성보다 공직 담당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방식이다.(O)

⇒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 공직자 선임은 추천과 윤번제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통하여 시민 누구나 공직 담당이 가능하였습니다. 참고로 윤번제는 차레를 돌아가면서 임무를 맡아 보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④ 추천제는 전쟁 관련 직책이나 재판정의 배심원 선출에는 활용되지 않았다.(X)

⇒ 아테네 민주 정치에서 행정관이나 재판관, 배심원은 추천에 의해 선출되었으나, 군사령관의 경우에는 능력이 중시되는 지위의 특성상 후보자 중에서 선거로 선출하였습니다.

14. [정답] ④

[출제단원] VI.국제 정치와 법

[출제영역] 국제 사회의 성립과 전개

ㄱ. 교황권이 군주권보다 우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X)

⇒ 베스트팔렌조약은 독일 30년 전쟁을 끝마치기 위해 1648년에 체결된 평화조약으로서 가톨릭 제국으로서의 신성로마제국을 사실상 붕괴시키고, 주권 국가들의 공동체인 근대 유럽의 정치구조가 나타나는 계기가 된 사건입니다. 즉, 교황이 주도하던 중세 봉건 체제가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붕괴되었고, 민족 국가가 중요한 정치

단위로 등장하면서 국제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ㄴ. 주권국가 개념이 확립되기 시작하였다.(O)

⇒ ㄱ. 해설 참조.

ㄷ. 국제기구 설립과 다자협의를 통한 평화 유지에 합의 하였다.(X)

⇒ 국제기구 설립과 다자협의를 통한 평화 유지는 국제연맹(1920)과 국제연합(1945)이 창설된 20C초의 국제 사회의 모습에 해당합니다.

ㄹ. 30년 전쟁을 종결시켰다.(O)

⇒ ㄱ. 해설 참조.

15. [정답] ④

[출제단원] I.민주 정치와 법

[출제영역] 사회 계약설

(가)는 자연상태를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상태로 이해하였다는 표현에서 ‘홉스’의 사회 계약설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질서 있고 평화로운 상태에서의 인간’이라는 표현에서 홉스가 아님을 알 수 있으며, ‘생명과 자유, 재산에 대한 권리를 더욱 확고하게 보장받기 위해’라는 표현에서 ‘로크’의 사회 계약설에 해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로크’는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생명, 자유, 재산에 대한 자연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 권리의 보장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의해 사회를 조직하고 정부를 구성하며, 정부가 자연권을 침해하면 인간은 정부에 저항하여 정부를 재구성할 권리를 갖는다고 이해하였습니다.

① (가)의 관점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성선설에 기초하고 있다.(X)

⇒ ‘홉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하여 성악설을 주장하였습니다. 참고로 ‘로크’는 성무선악설(백지설), ‘루소’는 성선설에 해당합니다.

② (가)는 (나)보다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이다.(X)

⇒ ‘홉스’는 절대 군주 체제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이해하였습니다. 반면, ‘로크’는 입헌 군주제, 대의제를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이해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주주의 국가에 부합하는 이론은 (가)보다는 (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③ (가)는 로크가, (나)는 홉스가 주장한 사회계약설이다.(X)

⇒ (가)는 ‘홉스’, (나)는 ‘로크’의 사회 계약설에 해당합니다.

④ (나)는 시민혁명의 정당성을 부여한 이론이다.(O)

⇒ ‘로크’는 위임계약론에 기초하여 위임의 취지에 반한 국가권력에 대한 저항권 행사는 가능하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참고로 ‘홉스’는 복종계약론에 의할 때 군주에 대한 저항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이해하였습니다.

16. [정답] ②

[출제단원] V. 세계 시장과 한국 경제

[출제영역] 국제수지표의 분석

① (X) 2014년의 자본수지에는 증권 투자가 포함된다.

⇒ 증권 투자는 간접 투자로 금융 계정의 항목입니다. 자본 수지의 항목에는 지적 재산권의 거래나 해외 이주비 등이 포함됩니다.

② (O) 2014년 말의 외환보유액은 전년 말에 비해 증가했다.

⇒ 2014년의 경상 수지는 55억 달러, 자본 금융 계정은 15억 달러 흑자로 국제 수지는 70억 달러 흑자입니다. 국제 수지가 흑자라는 것은 지급한 외화에 비해 수취한 외화가 더 많은 것이므로 외환 보유액은 증가했습니다.

③ (X) 2014년의 경상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 2013년과 2014년의 경상 수지는 모두 흑자입니다.

④ (X) 2014년 자본·금융 계정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 2014년의 자본·금융 계정은 모두 흑자입니다.

17. [정답] ①

[출제단원] III.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시장의 균형과 사회적 잉여

시장의 균형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형성됩니다. 우선 시장의 균형 가격을 계산하면 $7-2P=1+P$ 이므로 균형 가격은 2입니다. 그리고 균형 거래량을 계산하면 3입니다.

① (O) 시장균형일 때 가격은 2이다.

⇒ 해설참조

② (X) 시장균형일 때 사회적 잉여의 크기는 6이다.

⇒ 시장균형일 때 사회적 잉여의 크기는 3입니다.

③ (X) 시장균형일 때 거래량은 1이다.

⇒ 해설참조

④ (X) 시장균형일 때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3이다.

⇒ 시장균형일 때 생산자 잉여의 크기는 2입니다.

18. [정답] ①

[출제단원] III. 시장과 경제 활동

[출제영역] 시장 균형의 변동

(가)는 햄버거 시장의 수요 증가 요인이고 (나)는 햄버거 시장의 공급 감소 요인입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의 폭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면 균형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지만 거래량의 증감은 알 수 없습니다.

19. [정답] ④

[출제단원] IV.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경제활동 참가율과 실업률의 변화를 통해 고용지표의 변화 추론

남성의 경우 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한 가운데 경제 활동 참가율이 감소하고 있음을 통해 경제 활동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경제 활동 인구 중 취업자의 수는 감소하고 실업자의 수는 증가하는 경우 취업자의 감소폭이 실업자의 증가보다 큰 경우이거나 취업자와 실업자의 수가 모두 감소하지만 취업자의 감소폭이 큰 경우 제시된 자료와 같은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노동 가능 인구가 일정한 가운데 경제 활동 참가율이 일정함을 통해 경제 활동 인구는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실업률을 증가하고 있는 것을 통해 여성은 실업자가 증가하고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자의 증가와 취업자의 감소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① (X) 남성 취업자 수는 증가했다.

⇒ 해설참조

② (X) 여성 실업자 수는 변함이 없다.

⇒ 해설참조

③ (X) A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감소했다.

⇒ 남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변화가 없으므로 A국의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했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④ (O) A국의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높아졌다.

⇒ 남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감소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 인구는 변화가 없으므로 A국의 경제활동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높아졌음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20. [정답] ③

[출제단원] IV. 국민 경제의 이해

[출제영역] 로렌츠 곡선의 이해

① (X) 4개 국가 중 A국의 소득분배가 가장 불균등하다.

⇒ A국의 소득분배는 완전 평등 상태로 4개 국가 중 가장 평등합니다.

② (X) B국은 하위소득 인구의 40%가 약 60%의 소득누적비율을 차지한다.

⇒ B국은 하위소득 인구의 40%는 인구 누적 0~40%에 해당하는

인구로 이들의 소득누적비율은 약 20%입니다.

③ (O) C국은 상위소득 인구의 40%가 약 80%의 소득점유율을 보인다.

⇒ C국은 상위소득 인구의 40%는 인구 누적 60~100%에 해당하는 인구로 이들의 소득점유율은 약 80%입니다.

④ (X) 4개 국가 중 D국의 지니계수 값이 가장 작다.

⇒ 지니계수는 A국이 가장 작고 D국이 가장 큼니다.